

심의 민주주의 실험이 주는 시민교육적 함의

박성혁* · 박가나**

I. 들어가며

최근 사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정치 과정에 있어 시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점이다. 지난 1980년대 후반 형식적으로 민주화가 실현된 이후, 민주주의가 꾸준히 성숙됨에 따라, 이제 21세기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과제는 더 이상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는 형식적 민주화의 달성이 아니라, 자유, 정의, 인권, 평등이 보장되는 질 높은 민주주의를 고안하고 정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사회 문화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소수에게 집중된 비정상적인 권력구조와 정당과 선거 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 권력의 분권화와 분산, 국가, 시장, 시민 사회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대한 요구, 시민 참여의 증대와 시민단체의 활성화, 인터넷과 같은 대안적 미디어에서의 정치 실험과 같은 일련의 논의들은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들과 무관하지 않다. 대체로 참여 민주주의라는 개념들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심의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작업장 민주주의 등이 그것이다.

한편,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만큼이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다름 아닌 시민들의 직접 참여의 확대가 가져올 민주주의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이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자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옹호하거나 직접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바로 시민 교육과 민주주의의 발전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 의식에서, 본 연구는 최근 전자 민주주의와 더불어 21세기 새로운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대학원

참여 민주주의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심의 민주주의의 의미과 적용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 사례들을 통해 심의 민주주의의 실현 조건을 탐색한 후, 이러한 심의 민주주의 실현 조건들을 통해 제기되는 시민 교육적 요구와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심의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1. 심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요소 : 참여와 공공 토론

민주주의는 어원적으로 ‘인민의 자율적 통치’를 의미한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부터 오늘날 근대 국민 국가적 정치체 틀 안에서의 ‘자유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 실현 형태가 어떠한 간에 민주주의는 이념적으로 정치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자율적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공동체의 사안들, 즉 정치적 사안들을 처리하는 정치사회 질서의 확립을 그 핵심적 지향으로 가지고 있다(윤형식, 1999). 이렇듯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는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사회가 조직되는데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본래의 의미는 시민들에 의한,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정치, 다시 말해 직접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 사회의 나아갈 방향이 그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수많은 보통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고 통치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는 바로 참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핵심적 요소는 바로 공공 문제에 참여하는 일반시민들의 공적인 심사숙고(public deliberation) 과정이다. 공적 토론, 심사 숙고, 논쟁 등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함의를 도출해 내게 된다.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공공 문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하고 열린 참여를 실현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수준을 진전시키려는 이념으로,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심의 민주주의는 위에서 언급한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를 필수 조건으로 하여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대안적 논의라 할 수 있다. 심의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심의(Deliberation)가 합리적이며 고품질의 여론 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건전한 기초를 강화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Bohman, 1996; Dryzek, 1991; Fishik, 1995; Gutmann & Thompson, 1996; 박승관, 2000 재인용)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이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시민들간의 심의, 대화, 토론, 의사

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시도이다(임혁백, 2000).

시민들은 심의 과정을 통하여 공공 문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안적 관점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합리적이고 보다 정교한 견해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심의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이 가진 ‘공적 이성(the public reason)’을 활성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실천적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박승관, 2000). 물론, 아직까지 심의 민주주의가 제기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심의’를 민주주의의 확장과 심화를 위한 하나의 유력한 수단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듯 하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요구에 대해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 형태로는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더불어 진정한 민주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적 의사 결정에 일반시민들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러한 심의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2. 심의 민주주의의 조건

심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국민들의 선호를 양적으로 반영하는데 불과한 여론을 사려 깊은 심의를 통해 도달한 안정적인 공적 판단(public judgement)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심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오일환(2001)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효과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심의 참여자는 필요하고 의미 있는 실질적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헌법적 차원에서 심의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회원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심의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제시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 다섯째,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 기구가 심의 민주주의의 육성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Weeks(2000)에 의하면 심의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에는 4가지가 있는데, ①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 ② 높은 수준의 공적 판단(informed public judgement) ③ 심의의 기회 ④ 믿을만한 결과가 그것이다. 즉, 시민들의 참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소수만이 참여했을 때 편향성을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다수가 한꺼번에 참여할 때는 심의가 약해지므로 대표성을 가진 소수의 심의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표성과

개방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의 민주주의는 공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지식에 기반하여 충분한 심사 숙고의 기회를 가진 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심의의 기회는 심의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정보의 습득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창조적으로 적용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시민들간의 면대면 토의 과정을 증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참여의 질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참여가 방법론적으로 정당하며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가에 있다.

Edna F. Eiensiedel & Deborah L. Eastlick(2000)는 심의 민주주의의 한 유형인 Consensus Conference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심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요소들로서, 다양한 견해와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 시민들간의 평등성, 이슈의 투명성, 신빙성, 다른 의견에 대한 열린 사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Judith Petts(2001)는 지역사회토의(Community Dialogue), 지역의사결정(Community Decision)을 분석하면서 그 준거로서 참여한 시민들의 대표성 문제(편향성이 없는가), 의제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절차나 과정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가, 공공 토의에 참여하는가, 토의 과정이 의견의 변화를 가져 오는가, 시민들의 참여가 전문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은 없는가, 합의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공공 이익에 기반한 결론을 도출하는가, 과정이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진행되는가 등 보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작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한편 Mark Button & Kevin Mattson(1999)은 네 가지 유형의 심의 민주주의 모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준거로서 보통의 시민을 포함하는가 즉, 대표성의 문제와 실제 토의 과정이 심의적인가를 보면서 민주적 심의의 지향점으로서 교육적이고 합의적이고 정책에 있어 도구적이고 논쟁적 이슈를 다루는 등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 참여가 실제로 시민들의 평등한 심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임혁백(2000)이 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3가지 조건으로, 첫째 평등의 조건, 즉 발언, 질의, 심문, 토의에 있어 동등한 기회의 보장, 둘째 자유의 조건, 즉 자신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 마지막으로 이성(reason)의 조건, 즉 협상이나 타협이 아니라 '합리적인 합의'에 기반 하여야 한다는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심의 민주주의가 그 이념에 맞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 시민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참여 조건 보장, 둘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 셋째, 실질적 심의 기회의 보장, 네째, 심의의 질을 보장하는 시민적 능력 등이 필요하리라 본다.

3. 심의 민주주의의 의의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심의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결함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공동선에 대한 숙고된 심의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준다.

(1)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대의민주주의에 의하면 인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고, 정부는 이러한 인민들의 동의에 근거하여 지배의 정통성을 획득한다. 또 선출된 대표가 인민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행동하도록 강제되어야 하며, 인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대표를 투표를 통해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선거가 경쟁적이고, 정치적 참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며, 시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정부는 인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책임정부가 될 수 있다. 민주적 책임성은 시민들이 정부 정책이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지 여부를 판별하여 그 대표를 계속 권력의 자리에 남게 하든지 아니면 축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처럼 민주적 참여에 의한 정부 구성과 민주적 책임성의 확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이자 전제 조건이 된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인민의 지지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인민의 완벽한 대리인으로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하고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고안된 선거는 사실상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는 지속적인 참여여기보다는 간헐적인 참여일 수밖에 없다.

정치 공동체의 일에 대해 시민들이 이처럼 제한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한편으로 시민들에 대해 교육적 효과를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교육적 효과를 확대 및 증대시킬 수 있는 자치의 잠재적 능력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권력의 비대화와 그에 따른 사적영역의 위축 현상이 거듭해서 일어남에 따라 능동적 자치의 개념은 점차 위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문제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 관심과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자유를 구가하고 행사하는 것을 정부가 간섭하는데 대해 시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늘날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기술사회에서 공간적 거리, 시간적 지연, 다른 존재에 의한 대체, 또는 간섭 없이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

기도 한다. 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는 참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효과를 어떻게 하면 대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보장하고 발현하는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오늘날 심의 민주주의의 당위성이 증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 상호간의 공적 토론, 공적 문제에 관한 심사 숙고 및 논쟁들을 통해 정치적 평등성과 상호 존중의 상황을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직업적 정치가간의 물리적, 정서적, 위상적 거리는 물론이고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거리도 좁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 참여 민주주의의 질적 담보

앞서 언급하였듯이 심의 민주주의를 비롯한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들은 대체로 현실적인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무지하거나 비전문적인, 그리고 개별이익에 집착하는 대중에게 휘둘릴 가능성과 우연적 상황이나 표의 변덕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의 비합리성, 다수의 독재를 조장할 가능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심의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은 단순한 선호의 집합이나 선택이 아니라 ‘심의’에 의존한다. 이는 시민들과 대표들이 이성적인 성찰과 판단에 근거하여 공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토의, 토론, 심의하는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선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대화, 토의, 토론, 심의를 통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민주적 과정은 주어진 선호를 집합하여 그 중에서 집단적 선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발견, 설득, 교정의 과정을 통해서 공공의사 또는 집단적 의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심의 민주주의 하에서 ‘공적 토론의 영역’은 대화, 담론, 토론, 심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선호를 형성하고 세련화시키며, 자신의 잘못된 선호를 교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공 영역은 다양한 시각과 이익들이 상호 이해와 공동의 행동으로 수렴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다수의 시민들의 ‘참여’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한 공공 참여를 통해 참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전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집단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정당성까지도 획득하는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공적 담론의 성격을 선호의 집합에서 공동의 문제해결 모색으로 전환시켜준다. 의사 소통이 가능한 공동체 내에서 정보를 공동 출자하고 토의를 통해서 상황에 적합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심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이러한 심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사익에 근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이나 공동선의 관점에서 토론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선을 지향하는 정치가 변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Ⅲ. 심의 민주주의의 사례 연구

1. 심의 민주주의의 실험 사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개념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 불과 2-3년 전이다. 당연히 심의 민주주의의 개념이나 실현 조건, 유용성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엇갈린 견해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방법은, 심의 민주주의가 담고 있는 철학적 바탕이나 본질적 요소들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화 작업을 진전시켜 가는 한편, 비록 초보적인 형태나마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례 분석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화시켜 줌으로써 이의 현실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심의 민주주의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심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시민 교육적 의미는 실제 작동 과정을 관찰하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사례 분석은 더욱 유용할 수 있다.

(1) 사례1 : 심의적 여론조사(NIC : National Issue Convention)

NIC(National Issue Convention)는 미국 텍사스 대학의 ‘심의적 여론조사 센터’(The Center for Deliberative polling)에서 행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 대학의 Fishikin 교수가 고안하여 실행하고 있다. NIC는 대통령 예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전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들이 모여 일정 기간동안 중요 공공 쟁점을 시민 상호간, 그리고 전문가나 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자신의 견해와 판단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토론과 심의를 거친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투표를 통해 비교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TV를 통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

심의적 여론 조사는 잠정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예비선거 과정이 가지는 폐해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여론이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들과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못한 즉각적인 반응에 의해 여론이 형성되는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또한 NIC는 Fishikin의 정치철학적 신념을 직접 현실로 실험해 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Fishikin은 민주주의의 세가지 조건으로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 ‘비전제정치(nontyranny)’, 그리고 ‘심의(deliberation)’를 들고 있는데, 그는

정치적 평등이 지켜지고 다수의 횡포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심의’가 없다면 민주적 선택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여론 조사는 199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실시한 실험 이후 영국 민영 TV 네트워크와 몇 번의 성공적 실험을 수행한 뒤, 1996년 1월 텍사스 대학이 대통령 후보들과 심의적 여론 조사를 주최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심의적 여론조사(Deliberative opinion polling)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우선, 한 국가(혹은 주)에서 시민들을 전화나 개인적 접촉, 우편 등을 통해 접촉하여 무작위적 표본을 구성하고, 그들 중 약 200-300명 정도는 대학 캠퍼스와 시 중앙의 장소에서 회의나 토의에 참여한다. 토의에 참여하기 전 이슈에 대한 간단한 요약 문서를 받으며, 이러한 문서는 대체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자문위원회에 의해 감독되며, 공격적이고 언론에 개방적인 것이다. 일단 회의장에서 표본 시민들은 자신들이 다루어야 하는 이슈에 대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의견에 따라 투표한다. 토의과정은 소규모 면대면(face-to-face) 집단 토의로 진행된다. 시민들만으로 이루어진 이 집단 토의에서, 이슈에 대해 자신들과 대립하고 있는 의사 결정자 혹은 전문가(expert)들에게 자신들이 제기할 핵심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심의 하에 이들 전문가 패널들과 토의한다. 이러한 작은 규모의 집단 토의를 마친 후, 모든 참가자들이 속하는 전체 집단 회의(plenary session)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다시 같은 이슈와 후보자에 대해 모두 투표하게 되며, 이러한 광범위하고도 집중적인 심의의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의견의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심의적 여론 조사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 공식적인 정책이나 과정 변화 없이도 심의적인 그래서 정당성을 가지는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2) 사례2 : Consensus Conference

심의 민주주의의 모델로서 Consensus Conference는 미국에서 전문가들만의 회의로 시작하였으나 덴마크에서 전문가와 시민간의 회의로 변형되었다. Consensus Conference는 공공 이슈에 대한 탐구, 참가자들간의 심의, 정책적 제안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다루는 이슈가 공공 문제나 전문적·기술적인 문제로서, 전문가들의 논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이해 관계의 문제가 많다. 즉, 전문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윤리적인 측면의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제들이 그것이다. 인간 개놈 지도에 관한 문제, 유전자 변형 식품, 환경과 불임문제, 핵폐기물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Consensus Conference의 주된 목적은 이슈에 대해서 시민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 상호 작용과 토의 과정을 거쳐 정책 방향을 제언해 주는데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시민배심원 제도(Citizens' Jury)와 Town Hall Meeting의 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이슈를 다루면서

정책적 제언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Citizens' Jury의 성격과 비슷하고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토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Town Hall Meeting의 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현재의 Consensus Conference는 전문가의 결정이나 그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방식으로부터 보다 민주적이고 동등한 시민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과거의 시민 참여와 다르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많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Consensus Conference는 유럽이나 영미권 뿐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권에서도 활발히 논의·진행되고 있다.¹⁾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캐나다의 Citizen's Conference와 미국 Portland의 Conference가 있다.

(3) 사례3 : 시민배심원 제도(Citizens' Jury)

시민 배심원 제도는 미국 사법 제도에서 판결 과정에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을 배심원으로 두고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후 토의를 거쳐 합의(평결)에 이르게 하는 형식의 시민 참여 제도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시민 배심원 제도란 이미 사법 제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해 오던 것을 다른 정책 결정 영역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Consensus Conference와 같이 기술적 영역의 구체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 이러한 이슈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합리적 의사결정과정(토의와 합의로 구성되는)과 결합하려는 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또한 다른 심의 민주주의 모델과의 상대적 차별성을 찾는다면, 의제 설정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어 참여한 시민들이 자신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나 질문들을 제한하고 구체적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과, 대체로 소수의 인원을 모아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여 이들로부터 얻어지는 합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방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민 배심원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 Hertfordshire와 Lancashire의 시민 배심원 제도와 미국 워싱턴시의 시민 배심원 제도를 들 수 있다.

(4) 사례4 : 지역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mmittee)

지역자문위원회는 영국에서 나타난 심의 민주주의 모델이다. 광범위한 영향을 주게 되는 사회적 문제나 정책적 과제에 대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정책 결정자가 반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다른 심의 민주주의 모델과 같이 정보제공, 자문, 시민토의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시민 자문 위원회의 특징은 시민 배심원

1) 전 세계적으로 현재 실시되어온 C.C.는 대체로 35개 정도 되며, 주로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ucalgary.ca/~pudconf/> 참고

제도와 비교를 통해 두드러 지는데, 우선 위원회 운영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장기화(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기간으로 보면 몇 달이 되기도 한다) 되며 참여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시민 배심원제도는 참여자를 무작위적으로 선출하는데 반해 자문위원회는 참여자의 관심 영역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출한다. 즉,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의 관심을 ‘교육’으로 보고 관련 이슈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식이다. 또한 장기간 다수의 참여를 위해 비용도 시민 배심원 제도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배심원 제도가 대립되는 정책 대안들을 분석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라면 자문위원회는 보다 유연성이 높아 토의 과정에서 수렴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과정 중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토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5) 사례5 : 지역사회토의(Community Dialogue)

지역사회 토의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며, 참여적 시민 문화의 부활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 기회를 개방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위치로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토의는 의제 설정(토의의 범위와 수준 결정), 전략 개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토의를 진전시켜 다차원적인 의견 교환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한다. 사실 지역사회 토의의 방식은 따로 정해진 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슈의 범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도 하고 참여 집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Consensus Conference와 비슷한 방식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다루는 사례들은 다른 심의민주주의 방식과 달리, 심의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개방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된다. 이슈가 개방적이 되면서 합의의 성격이나 정책에의 반영 수준, 참여 형태가 달라지는 점에 주목하여 다른 모델들과 구분하여 제시하려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Fort Collins의 지역사회 토의와 Eugene 지역의 지역사회 토의가 있다.

(6) 사례6 : Eugene과 Sacramento 지역의 의사결정

이 두 지역에서의 심의 민주주의 모델은 앞의 지역사회 토의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슈가 제기된 배경과 이슈의 구체성, 효과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지역에서 모두 제기된 이슈는 복지 서비스와 시민들의 세금부담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이 두 지역에서는 복지 예산과 실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간에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행정 관료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요구되었다. 처음의 시민 참여는 전통적인 방식인 전화 투표, 지역사회 인사와의 면담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회가 예상하던 반응과 다른 결과를 보이자 시민들간의 그리고 시민들과의 보다 깊은 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각 가정에 예산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주어지는 소그룹 대면 토의를 통해 시민들간의 의견을 모으고자 했다. 첫 번째 포럼에서는 680명 이상이 참가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두 번째 포럼에서는 첫 번째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개발하여 3가지의 구체적인 대안을 설정하여 논의하게 하였다. 결국 이러한 시민 토의는 의회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는 등 성공적 사례로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두 지역 중 Eugene 지역의 경우, 이러한 성공의 요인으로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교육 받은 시민들이 다수 존재하며, 인구학적 특성이 단일적이고, 참여적 시민문화의 전통 등이 성공의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7) 사례7 : National Issue Forum

NIF는 심의 민주주의 모델 중 시민 교육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NIF는 현재 미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들 중 하나로서 이들이 포럼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된 이유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고 참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슈나 사회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지식 수준 향상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교육적 형태가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토론 형태의 교육 방식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다. 현재 NIF는 자체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여러 심의민주주의 모델에 이용되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Briand은 자신이 개발한 CCP(Community Convention Process)에 NIF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Fishikin 역시 1996년 NIC(National Issue Convention)에서 NIF의 전문가가 전체 진행을 담당하고 NIF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민들의 토의를 이끌었다. 현재 NIF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city-wide forum, correctional program, cooperative extension program, leadership program, public library discussion, local issues forum, literacy classes, forum in professional associations, 종교, 여성계, 지역원로가 주도하는 토의, 학습공동체 조직 등 다양하다.

NIF는 다른 심의 민주주의 모델과는 달리 시민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고안된

프로그램이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논의되고 합의에 이른 문제들을 관련 정책 결정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정책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심의 민주주의 모델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8) 사례8 : 여성유권자 연맹의 시민회의

메사추세츠와 워싱턴에서 각각 실시된 여성유권자 연맹의 시민 회의는 민간 단체가 정책 이슈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시민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때의 이슈는 시의 캠페인 자금 운영 개혁에 관련된 것이었다. 민간 단체가 주체가 되었으나 시민 교육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NIF와 다르고, 정책 제언이나 결정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위해 의회나 정책 결정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Consensus Conference나 다른 시민 포럼과도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관련된 이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한 시민들의 심의 과정을 핵심으로 하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토의한다는 점에서 다른 심의 민주주의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여성 유권자 연맹은 총 3번의 시민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맹에 의해 무작위적으로 추출된 소수의 시민(약 20명)이 첫 번째 회의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슈와 관련하여 토의하고, 둘째 회의에서는 첫 번째 얻어진 정보들과 이후 형성된 견해들을 모아 서로 다른 견해들과 정책적 대안들을 평가한다. 마지막 회의에서 시민들은 그간 얻어진 자신들의 의견과 질문들을 시의회 의원과 함께 논의하게 된다.

2. 심의 민주주의의 시민교육적 함의

(1) 심의 민주주의의 경험을 통한 시민 교육 효과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심의 민주주의 실험 사례들은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의식과 정치적 효능감이 증가하는 등 정치 의식의 향상 효과와 함께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대화나 설득에 있어 필요한 상호 존중 태도를 배우는 등 시민교육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민주주의는 일정한 인간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하여 관여할 능력이 있고 관여할 의지가 있는 시민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시민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진다. 따라서 민주 시민을 기르기 위한 시민 교육은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해 불가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 시민을 기르기 위한 시민 교육은 정규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학습된다는 점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공공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반복적인 심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고, 공동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는 학습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시민들에게 직접 공공의 문제를 묻지 않는다면 시민의 진정한 정치적 관심은 생기기 힘들다. 이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강도 높은 공공 토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기 결정의 정치적인 책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여론 조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심의 민주주의에서의 공공 의사 결정 과정은 참여자들의 의사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적인 토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찬반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이에 대해 논쟁하는 가운데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자는 자신의 의견을 공공연히 표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훈련을 하게 되며, 반대로 타인의 의견이나 자신과 반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 소통 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 공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 결국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시민 교육을 통한 심의의 질적 수준 제고

심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교육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이 필수적이다. 심의 민주주의에서 공공 사안에 대한 ‘공적 토의’는 핵심적 요소이자 전제 조건이며, 심의 민주주의가 다른 참여 민주주의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일련의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다름 아닌 참여 구성원간의 ‘심의’과정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의 과정의 질 제고는 다름 아닌 시민 교육의 역할에 달려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토론 경험의 확대, 질적 수월성을 담보한 토론 능력 향상, 풍부한 자료 제공, 의사 소통 능력 향상, 타인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심의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심의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은 의문시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심의를 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이 문제다.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대표의 실패’ 뿐 아니라 ‘시민의 실패’이기도 하다. 민주화의 결실로 지방 자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한국인들은 주민 자치에 익숙하지 않다. 시민들은 문제 해결에 실패할 때마다 국가를 원망하고 대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충분히 정보를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주장을 이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토론과 심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반토론적인 ‘거리의 정치’, ‘집단시위의 정

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다원주의적 가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에티켓 사회, 관용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치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 대화, 토론, 심의를 통해 공적 문제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내려는 심의 민주주의의 토양은 척박할 수밖에 없다(임혁백, 2000).

따라서 심의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심의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만큼이나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시민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올바른 시민적 행동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거나,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부단히 보충되는 것이며, 생활하는 가운데 체험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다.

(3)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의 활용

심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한편 그 속에서 시민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당연히 시민 교육에도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적 소양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단체 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나 사회 단체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모두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준법정신, 참여의식, 공동체 의식 등 민주 시민성을 양성하는 것,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법에 대한 훈련, 타인과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 경청, 타협에 대한 경험 쌓기 등이 될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에 대해 주는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공식적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가지는 막대한 영향력을 비추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와 효과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은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학교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우선, 기존의 교과 교육 중심의 시민 교육에서 탈피하고 자기 주도적 참여를 일상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자들이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체임을 스스로 깨닫고 주권자로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학교 시민교육에서는 학생 자신이 교육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한 채, 주어진 목적에 따라 부과되는 학습 활동에 구속되고 있다. 민주 시민 교육은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이나 내용의 단순한 암기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구체적인 체험이 가능한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운동 경기를 아무리 많이 관람한다고 해도 운동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았듯이, 민주 시민성도 체험을 통하여서만 실천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최현섭, 2000).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수업 내에서는 토론 수업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학급 회의를 활성화시키고 학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 통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등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실 수업 방법의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심의 민주주의 조건에서도 보았듯이 심의의 질적 보장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실질적 심의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무조건 심의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외에, 교실 수업을 통하여 이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문가를 초빙하여 필요에 따라 학습의 내용을 풍부히 하는 노력이나 특수한 문제나 주제에 대한 구조화된 토의 수업, 현장 연구를 위한 모둠 학습, 위의 심의 민주주의 사례에서 보았던 모의재판이나 공공포럼을 수업에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수업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다양한 참여 활동을 양성하고 확산하며, 이를 통한 실질적 참여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교실 수업 뿐 아니라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강화해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형식적인 학교수업 중 하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이러한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이 속한 모임의 활동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함으로써 참여의 의미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V. 나오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치 권력이 국가 중심의 정치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 서서히 시민 사회에도 일정 몫이 주어지면서, 바야흐로 참여형 민주주의가 지금까지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내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한편, 심의 민주주의와 같은 참여 민주주의의 성패는 결정적으로 이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자질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심의' 과정이 필수적인 심의 민주주의의 경우, 심의의 질은 정보의 습득과 토의 기술, 의사 소통 능력, 타인에 대한 인정과 배려 등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적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 즉 시민교육에 대한 양적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심의 민주주의의 실제 실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인 학교, 시민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 혹은 시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의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성을 기르는데 보다 적합한 교육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실험 사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포괄적이

고 기초적인 수준의 분석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며 앞으로 심의 민주주의 실행 이후 나타나는 교육적 효과를 지식, 가치, 태도 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다거나 참여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교육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 혹은 여기에서 제시된 심의 민주주의 유형 중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적용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승관(2000). 속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보 v.45(1)
- 백승현(2000). 참여민주주의와 의회정치. 의정연구 v.6(1)
- 안성윤(1999). 십의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 오일환(2001). 디지털시대의 정치과정의 변화와 참여민주주의의 발전방향 모색
- 윤형식(1999). 토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참여민주주의의 논의이론적 정초에 관한 철학적 성찰- 평화논총 v.3(1)
- 이기우(2001). 대의민주제의 한계와 직접 민주제의 필요성
- 이상욱, 김대영(1998). 초, 중등학교의 법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모색. 영남법학. 월정 조 정호 교수 정년퇴임기념 특집호. 영남대 법학연구소.
- 임혁백(2000).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의정연구 v.6(2)
- 임희숙(2001). 참여민주적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현섭(2000).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회참여 체험 훈련 프로그램 개발연구. 교육연구.v.10.
- Button Mark & Mattson Kevin(1999). Deliberative Democracy in Practice: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Civic Deliberation. Polity v.31(4)
- Edward C, Weeks(2000). The Practice of Deliberative Democracy: Result from Four Large-scale trial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60(4)
- Einsiedel E.F. & Eastlick D.L.(2000). Consensus Conference as Deliberative Democracy: A Communications Perspective. Science Communication v.21
- Elster, Jon ed.(1998).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Fishikin, J.S. 외(2000). Deliberation Polling and Public Consultation. Parliamentary Affairs. v.53
- Fishikin, J.S.(1991). Democracy and Deliberation: New Directions for Democratic Reform.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 Gastil John & Dillard J.P.(1999). The Aims, Methods, and Effects of Deliberative Civic Education through the National Issue Forums. Communication Education v.48(3)
- Klas Roth(2000). Democracy, Education and Citizenship : Towards a Theory on the Education of Deliberative Democratic Citizens. Stockholm Institute of Education Press.

Mathews David (1994). 「Politics for People」.

Pett Judith(2001).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Deliberative Process: Waste Management Case-Studies.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v.44(2)

<Abstract>

Implications of experimental cases about the deliberative
democracy to civic education

Park, Sung-Hyeok* · Park, Ga-Na**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mplications of experimental cases about the deliberative democracy to civic education, which is taking notice as a new form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with the electronic democracy lately in the 21st century.

The deliberative democracy is able to supplement the limit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rough a systematic device to activate spontaneous participation of a large number of citizens, and make up for the point in participation without substance that models of a direct democracy may have if things go wrong, by setting a deep discussion process forth as a premise. The experimental cases about the deliberative democracy offer a practical opportunity for all citizens to participate, provide citizens extensive information about the nature of the policy problem, engage citizen in the same problem-solving context as elected officials, and use rigorous methods.

But a civil ability of determining rational decision has to be premised so as to realize the deliberative democracy. This means a demand for the activation of the civic education. Although citizens are provided the chance of upgrading the civil quality necessary for the solution to a public problem through a process of the deliberative democracy, more various programs for the civic education have to be developed and conducted first.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